

환경관리공단,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신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간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신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환경분야 신기술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은 환경분야의 신기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과 특징, 신기술 보유업체와 기술정보 검색,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기술정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 기술 수요자에게 종합적인 신기술 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또 환경부, 환경유관기관, 신기술 보유업체 등과의 링크 서비스를 통해 기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신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간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신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환경분야 신기술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게 접근할 수 있고 신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도 개설했다.

국가소유 폐수처리장 통합관리 추진

경남 진주, 충북 청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소유의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올해 중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주)환경시설관리공단은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격제어시설 감시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 소유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전북 익산과 전남 여수, 대구 남천과 달성, 경남진주, 충북 청주에 한 곳씩 있으며 6개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전체 폐수종말처리장(70만7천460t)의 절반인 총 35만4천700t이다.

공단측은 남천과 청주, 여수 처리장에 관리시스템을 우선 설치하고 2단계로 달성과 익산, 진주 처리장에 전산화 설치를 설치한 후 3단계로 6개 처리시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측은 환경부의 시설투자적립금 10억원과 자체 예산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926개 업체 질소·인 폐수 무단 배출

녹조와 적조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인 배출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됐지만 폐수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업소가 전국적으로 92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4만8천여개 폐수배출업소 중 1만여개 업소가 질소·인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9% 가량인 926개 업소에서 방지시설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팔당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던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질소는 청정지역과 기타지역에서 각각 30mg/l와 60mg/l, 인은 4mg/l와 8mg/l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볼 때 경남 238개, 충북 123개, 강원 121개, 제주 85개, 경기 80개 등 모두 926개 업소에서 질소·인 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질소와 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별 업소에 대해 생산공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개선해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질소와 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차 개선명령 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 업소의 경우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질소와 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 개발까지 기준적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재작년 말 기준 총질소와 총인이 팔당댐에서 2.10mg/l 와 0.05mg/l, 영산강에서 7.02mg/l 와 0.331mg/l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하천과 호소에서 기준치(총질소 0.5mg/l, 총인 0.03mg/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친화성 평가제 도입

대통령직인수위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개발 정책 및 신도시개발, 건물신축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를 도입,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안노선을 검토할 때까지 현재

불암산, 수락산에 진행중인 터널 공사를 우선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6일 사회문화여성분과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새정부에서는 개발과 환경 등 충돌하는 가치관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염물질 법정기준치 이하라도 피해 배상

오염물질을 법에 정한 기준치 이하로 배출했다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환경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모씨 등 24명이 안강농공단지에 입주한 T사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과 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2억2856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341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T사가 고농도의 불소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를 점토와 섞어 적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근에 위치한 이씨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 "비록 T사가 배출한 불화수소농도가 1.93ppm과 2.26ppm으로 배

출허용기준(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농작물이 다른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재배된 감이나 부추보다 2~3배 높은 불소가 검출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환경오염배출업소 49곳 적발

부산시는 지난 한달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8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경고 26곳, 개선명령 8곳, 폐쇄명령 8곳, 조치이행 2곳, 고발 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처분 내용을 보면 (주)태연버스 등 8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과 함께 폐쇄명령을 받았고 (주)영도산업 등 3개 업체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사실이 드러

대통령직인수위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개발 정책 및 신도시개발, 건물신축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를 도입,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또 성립종합토건 등 3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시는 이 기간 차량 3천155대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벌여 개선명령 274대와 사용중지 19대, 과태료 2천644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조례 제정

서울시는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상반기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VOC 발생을 줄이려면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도장업체가 저온응축시설, 활성탄 흡착시설 등 방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서울시는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상반기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VOC 발생을 줄이려면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도장업체가 저온응축시설, 활성탄 흡착시설 등 방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2월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을 2월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하지만 도장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 조례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5월 이후로 연기하고 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VOC는 휘발성이 높아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물질이며 악성빈혈, 피부염, 말초신경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인체 유해 물질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공해 방지와 대기 개선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및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12월 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환경부는 2002년 9~12월중에 전국 각 시·도(시·군·구)와 환경관리청에서 총 42,712소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5.6%에 해당하는 2,37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주)거산, 대신토건(주),

아이앤아이스틸(주) 포항1공장, (주)두산전자사업 구미공장, (주)동원 등 1,104개 사업장을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전방군제(주), 금호환경(주), (주)효진텍스타일, (주)푸른솔식품, 삼창무역 등 49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가동

부산지역 낙동강 둔치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부산시의 새 기구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발족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업단은 ▲낙동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정비해 낙동강권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둔치 무단 경작에 따른 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 자연환경 복원·보전추진 ▲수변위락, 수변경관 감상 등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자연생태, 환경, 공원 등 생태문화관광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軍골프장 6월부터 오염물질배출 단속

환경오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오염

물질 배출 지도·단속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군부대 골프장의 수질·토양 오염을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난 2월 9일 밝혔다.

규제심사 중인 이 시행규칙은 6월부터 발효된다.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군부대 골프장은 규모를 막론하고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농약 잔류량 검사 등 관할 시·도지사의 환경 관련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주택가 공해공장 주민피해 이전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 박금준(41세) 등 135명이 주택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두통으로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광염직공업사와 도봉구청을 상대로 2억 2,540만원의 배상과 공장이전을 요구한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자가 2002월 12월 31일자로 공장을 폐쇄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종결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이 공장은 합성원사 염색공장으로 염료와 초산류를 배합하는 조색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100~130℃의 고온으

로 속성·건조하면서 다량의 수증기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매월 6,000~8,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염방지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조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개연성이 인정됐다.

도봉구청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공장 주변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97년 6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악취는 8회, 소음은 11회, 폐수는 16회를 측정하였으나 2002년 4월과 6월 소음에 대해서만 두 차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악취는 한번도 적발사실이 없는 등 행정규제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오염예보제 실시

선진국 도시보다 최고 4배까지 높은 대기중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오염예보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달중 미세먼지 오염예보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과 예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4~5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시범사업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예보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71 $\mu\text{g}/\text{m}^3$)는 영국 런던의 3

배, 일본 도쿄의 2배에 달하는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실정.

환경부는 연말에 예보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해 예측값과 실측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등 환경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86억원 지원

환경부는 폐기물의 수거 및 선별 등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총 382억원의 예산 가운데 86억원을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재활용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광명 40억 5천500만원(국고 12억1천600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 박금준(41세) 등 135명이 주택가 염색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두통으로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삼광염직공업사와 도봉구청을 상대로 2억 2,540만원의 배상과 공장이전을 요구한 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자가 2002월 12월 31일자로 공장을 폐쇄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여 종결했다.

원) ▲강원 원주 97억8천400만원 (11억7천400만원) ▲전남 나주 24억9천만원(7억4천700만원) 등으로 지자체별 예산이 편성됐다.

**폐수 배출기준 맞게 처리해도
유해 독성물질 남아**

공장 폐수를 현행 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해 흘러보냈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는 환경부 의뢰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공단 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염료, 제지,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 폐수 배출시설 26곳의 방류수에 생물을 넣어 실험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각 시설의 방류수를 희석한 물에 송사리를 넣어 4일간 키운 결과 7개 시설에서 절반 이상의

공장 폐수를 현행 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해 흘러보냈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는 환경부 의뢰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공단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염료, 제지,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 폐수 배출시설 26곳의 방류수에 생물을 넣어 실험한 결과다.

송사리가 죽는 등 모두 11개 시설에서 독성이 확인됐다.

물벼룩의 경우 2일간 희석수에 키운 결과 1차 실험에서는 15개 시설, 2차 실험에서는 11개 시설에서 폐사해 독성이 확인됐다.

7일간 넣어둔 개구리밥은 모든 시설의 방류수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그러나 방류수의 수질은 3개 시설만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을 초과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폐수처리장 10곳 중 1곳 무단방류

국내 폐수종말처리장 10곳 가운데 1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의 116개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분기 때보다 5개소 늘어난 11개 처리장(전체의 9.4%)의 처리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을 적발, 적정처리 방안 마련 등의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반시설은 지난해 1.4분기에 12곳, 2.4분기 4곳, 3.4분기에는 6곳이 적발됐다.

단속된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였고 처리용량이 큰 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은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 3.4분기에 단속됐던 충남 구항처리장의 경우 시설이 부적절해 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오염이 더 심한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 환경기초시설비
3천700억 지원**

환경관리공단이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등에 지원하는 융자지원 규모가 확정됐다.

공단은 지난 1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올해 8개 사업에 총 3천70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민간분야 융자지원 규모는 총 960억원으로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부문에 360억원이 지원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설치·대행 자금 등 환경개선자금에 60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 등 방지시설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중수도 시설, 환경시설의 에너지절감·성능개선 등을 추진하는 효율성 제고사업과 물절약시설 및 물절약투자대행업, 성공불제사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부분별 최대 50억원까지 소요자금 전액이 지원되며 환경기술개발자금은 3억원, 환경기술산

업화자금(운전자금 포함)은 10억원
까지 지원된다.

폐수 무단방류 주류업자 적발

인천 강화경찰서는 최근 주정 제조
과정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방류
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가시오가피술” 제조업자 김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월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에 화삼주소
라는 상호로 주류공장을 차린 뒤 술
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 6
천ℓ 정도의 폐수를 최근까지 하수
구를 통해 버려온 혐의다.

김씨는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갖
추지 않은 채 발효중 발생하는 하루
평균 23.16㎡의 오염된 공기를 무
단 배출시켜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낙동강유역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짝퉁**

낙동강유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
한 신고 포상금이 지난 2년간 1천
5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환경오
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가 시행된뒤 2001년 34건에 731만
원, 지난해 27건에 807만원 등 모두
61건에 1천 538만원이 지급됐다.
금액별로는 최고금액인 100만원이

모두 3건이었으며 50만원이상 100
만원미만이 9건, 10만원이상 50만
원미만 38건, 10만원미만 11건으로
집계됐다.

낙동강환경청은 “오·폐수 무단방
류와 악취,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환경 훼손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저 2만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사실에 대한 현
장점검시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신
고자에게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
를 지급하는 등 환경오염 신고를 활
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산단 주민 환경피해 집단소송

전북 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 주민
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군산산단 주변 주민들은 지난 1월
21일 “2월초에 군산시와 산단 입주
11개 기업을 상대로 92억6천만원
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마련했으며 최근
변호인 측으로부터 소송 관련 설명
회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사)시민환경연구소에
서 98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실시한 “군산지방산단 주변지역 환
경피해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주민과 군산시는 지난 98년 6월 산
단 주변의 악취, 대기, 수질, 소음, 토
양오염 등 주민피해와 생태계 변화
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주민 이주와 보상을 실시하기
로 합의했다.

주민들은 “군산시와 산단 입주업체
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주
민들에게 충분한 이주 비용과 육체
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따른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자율관리지역협의회 출범

인천지역 1천900여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인천환경자율관리지역
협의회”가 지난 1월 22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명예환경감시원(1천979
명)과 환경공무원 1명이 조(組)를
구성, 매일 인천시내 배출업소에 대
한 순찰활동을 벌여 위반사항 확인

낙동강유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지난 2년간
1천5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
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된뒤 2001년
34건에 731만원, 지난해 27건에
807만원 등 모두 61건에 1천
538만원이 지급됐다.

및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 국고 5천만원을 지원받아 남동공단 등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지원사업(환경홈다터제)도 펼칠 예정이다.

충남 서해안 해양오염위반사범

154건 적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한해 서해안에서 154건의 해양오염 위반사범을 적발, 이 가운데 69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23건에 비해 31건(25%)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바다에 기름 및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오염행위가 59건, 각종 범규 위반 95건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 해양 오염행위 신고자 16명에게는 신고 포상금 140만 원을 지급했다.

소각시설 외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철비철금속부품 산업시설이나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선별작업을 거쳐 선정된 1천281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가운데 대표적인 16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단속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해양오염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명예 해양오염 감시원과 신고 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해·육상 및 헬기를 이용한 입체 감시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검, 환경사범 44명 기소

제주지검은 지난 1월 17일 축산폐수를 수거, 야산에 무단방류한 혐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염모(57.남제주군 안덕면)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축산폐수 수집·운반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축산폐수 배출농가로부터 15t 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256t을 수거한 뒤 액비살포 지역으로 신고되지 않은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일대 야산에 무단 살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 없이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고모(44.제주시 도평동), 조모(21.북제주군 한림읍)씨 등 축산농가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축산농가 21명, 인쇄소 6명, 수산물가공업체 2명, 기타 세탁업체, 석재가공업체 대표 등 41명을 축산폐수처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본격화

소각시설 외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철비철금속부품 산업시설이나 화학제품 제조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선별작업을 거쳐 선정된 1천281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가운데 대표적인 16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강산업과 비철금속산업, 비금속광물산업 등 115개 시설에 대한 실측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40~50개 시설에 대한 측정도 하반기 실시된다.

배출량 조사에는 환경관리공단과 포항공과대학, 부경대학이 참여한 다.

환경부는 소각 및 비소각시설 조사가 완료되면 다이옥신 배출원과 배출량 파악을 통해 저감 가능 분야와 시설별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해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정화조청소업자 비리 심각

서울과 인천, 경기 등지의 정화조 처리업무 대행회사들이 수수료 과다청구 등 불법, 비리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지난 2월 17일 드러났다. 환경부가 작년말 전국의 1천719개 정화조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

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9개 (5.2%) 업체가 요금 과다징수, 불량 차량 운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과 빌딩의 정화조를 처리하면서 일정 요금 외에 수고비를 뜯어왔고 인천과 울산, 경기지역 일부 업체는 차량에 미리 물을 채우고 청소를 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양을 수거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부당요금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시의 일부 업체들은 정화조 청소용 차량을 이용해 돼지피 등 도축장에서나온 폐수도 운반했고 충남 지역 일부 업체는 정화조에서 수거한 9의 분뇨를 무단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술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장비 등 영업허가의 최소요건만 구비하면 허가가 나오는 법적 미비점에 따른 것으로, 수원과 울산의 경우 30개 업체가 난립해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충북은 도내 업체에 각각 850만원, 대전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89개 업체에 모두 3천8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환경부는 앞으로 정화조 청소업 허가요건을 강화해 소규모 업체 통폐합을 유도하고 청소 대행업체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낙동강물 이용 부담금 징수부당 가처분 신청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민들에게 징

수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이 법적으로 부당하다며 최근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낙동강 보존회는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관련해 환경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물이용 부담금을 따로 지우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도 배치된다"며 물이용 부담금 징수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낙동강 하류 수역의 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상수원 보호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